■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제주도교육청·제주시·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해상풍력 20곳 더?… "도민공감대 형성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정책 '도마'
주민소통·경관훼손 등 지적
도 "교육·설명회 준비 노력"

조훈배 의원

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계획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주민설명회 부족 등 주민수용성 미확보 문제가 제기되며 심사보류된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꺼내들고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온 섬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건데 아직까지 지역설명회나 간담회가 없다"며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찬반을 떠나 대정읍 전체 주민 대상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풍력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으로 경관의 문제를 꼽으며 "경관문제를 해결못하면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정문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대략)20곳은 더 생겨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며 "경관을 일부 훼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할지, 경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상풍력을 포기할지 이제는 도민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전 인류적 의무이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속도감 있게 진행안되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충분하게 도민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학교 취업지원관, 제주엔 단 한 명도 없어"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조직 운영 허점
파견교사 적절성 문제 지적

김희현 의원

김장영 의원

올해 초 단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이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취업지원관 인력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졸 취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타 시도에선 센터 내 취업지원관이 고정 배치되고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제주에만 학교에 취업지원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취업지원센터 내 취업담당관 2명이 특성화고 10곳의 취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년째 제주가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지만 센터의 인력구조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의 파견교사 운영 적절성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이 교육정책연구소에 특수파견 교사 6명을 뒀는데 학교교육과 등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다녀보니 사무관 정원이 있어도 배치가 안돼 각기 다른 과를 한 직원이 겸직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5급과 6급을 묶어 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논란이 없도록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합창단 지휘자 공모 "조례 따라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 "행정행위 거부한 것"
고희범 시장 "쉽지않은 문제"

이경용 위원장

양영식 의원

문종태 의원

제주도립제주합창단 객원 지휘자 공모와 운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이 부결되고 도의회에서도 새로운 제도개선이 나왔는데 제주시가 지휘자 공모 대신 올해 하반기 객원 지휘자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휘자 공모라는 행정 행위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멋대로 객원 지휘자를 채용하고 원래대로 공모라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독단을 막기 위해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제주합창단이 4분열, 5분열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그러면 합창단 운영에 관한 것은 그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합창단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말이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년간 절차를 진행하다 뜻대로 안 된 것도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다. 문화예술인들이 상대여서 그들을 존중하며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중앙권한 이양 받았지만 미활용 여전

행정자치위원회

5189건중 819건 활용 안해
좌남수 의원, 개선 요구
도,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좌남수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이양받은 중앙사무권한 일부가 여전히 미활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 5189건 중 4370건이 활용, 819건이 미활용되고 있다. 미활용 권한 중 1유형(법률→도 조례)이 2건, 4유형(대통령령·부령→도 조례)이 816건, 5유형(특별법을 통해 제주에만 부여)이 1건이다.

도는 4유형의 경우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과 절차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실익이 없어 미개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양여 가능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중에 있어 미활용되고 있다.

2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좌 의원은 특히 농지분할할 수 있는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도는 농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 의원은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추진단에서 확실하게 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미활용 권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조례로 권한 이양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 조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대책 미비"

환경도시위원회

반환소송 패소 대비 주문
양 시장 "도와 협의할 것"

강연호 의원

서귀포시가 향후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미불용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정·비법정도로 합해 공시지가 기준 보상금액은 서귀포시가 3838억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1조 2500억원으로 감당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법정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보상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정했다"며 "문제는 민원인들이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서귀포시가 민원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될 금액은 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미지급용지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시 행정에서는 소송비용과 5년간 부당이익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가 협력해 조속히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윤경 시장은 "도와 협의해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의 입장에서 단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귀포시가 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19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 건 명: 2019년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2019. 11. 04.(월) 14:30 ~ 18:00
■ 장 소: 제주매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

□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제주산학융합원
□ 후 원: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 (사)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누리커뮤니케이션
□ 참석대상: 화장품 관련 산·학·연 등 관계자

주요내용
– SESSION Ⅰ. 글로벌 화장품 시장 현황 및 마케팅 전략
· 글로벌 화장품 산업트렌드와 시장진출 전략 (LG생활건강 '후'의 성공사례)
· 유튜브 시대 타깃 마케팅 전략
– SESSION Ⅱ. 제주화장품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 제주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현황

문 의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김서연 연구원
☎ 064-720-2358, FAX: 064-720-2380, E-mail: sy613@jejutp.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JTP 제주테크노파크 JEJU TECHNOPARK

2019 청소년 자해 이해와 개입을 위한 학술 포럼
내일을 살고 싶은 절박한 신호
"괜찮아, 같이 노력해 보자"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안 모색을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9. 11. 1(금) 15:00 ~ 17:30
장 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대상: 청소년 지도자, 학교 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
□ 주요 내용
■ 개회사: 양명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격려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조 강연: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토 론
– 좌 장: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 패널 1: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패널 2: 고성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패널 3: 강나리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패널 4: 양명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세부일정
15:00 ~ 15:10 개회사, 격려사, 축사
15:10 ~ 15:50 기조 강연
15:50 ~ 17:10 토론
17:10 ~ 17:30 질의 응답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 및 사전 접수 연락처: 064-759-9951